



안보전략논단

[2025년 2월호]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48(25-2) | 2025. 2. 3

독일·미국군의 혁신이 주는 시사점
김성진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소회
이재권

회색지대(the Gray Zone) 전략
장재필

독일·미국군의 혁신이 주는 시사점

김 성 진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인류 역사에서 전통이 형성되고 난 다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국가는 정치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특정한 시대정신을 반영하거나, 현재 모습 또는 미래의 역할과 방향성(Directivity)이 바뀌기도 한다. 일반 집단(단체)은 이해관계에 따라 가치와 역할의 변화를 수시로 요구받는다. 탄핵 정국이 반복되는 와중에 일어난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이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불렀고, 나름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퇴행시켰다. 이로 인해 정치·외교·안보적 위기와 경제 불확실성은 커져 있다. 혼돈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은 주변국이 국익을 추구하는 노력과 배치되고 있기에 안타깝다.

2025년 1월 ‘미국 우선·팽창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국제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2022년 10월 ‘국가안보전략서(NSS)’는 중국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 국가이자 경제·외교·군사·기술적으로도 국제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진 유일한 경쟁국”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反 접근/지역거부(A2/AD) 전략’과 ‘양적 우세’에 대응하고자 ‘리플리케이터(Replicator-복제기) 전략’으로 소·자율형 드론 떼(군집)로 공격하는 개념과 국방과 학기술 혁신 등을 포함하는 ‘상쇄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통상 분야엔 고관세를 부과하고 안보 분야에선 군사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동맹·우방국에 비용분담의 압박을 주고 있다. 위와 같이 굵직한 현재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았으며, 다음은 주요 선진국의 군에 대한 혁신을 통해 오늘날의 강군이 된 사례들이다.

독일은 과도한 국가주의에 빠져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다. 독일군에 ‘제복을 입은 시민’이란 개념이 없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유민주주의 군대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처지에 직면하면서 등장했다. 서독 연방군의 전신인 ‘블랑크 국(Blank Amt)’의 주도로 ‘내적 지휘’와 ‘제복을 입은 시민’ 개념이 고안되었다. 이후 50여 년간 스스로 다음과 같은 환골탈태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1단계는 1965년 ‘서독 연방군과 전통 노선’을 공식화하면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역할을 포함하였다. 이는 그간의 잘못된 재조명하고 군의 새로운 가치·역할에 관한 지침이었지만, 모호하고 개괄적이다 보니 전통주의자-개혁주의자 간 논쟁으로 번졌다. 결국 현실과 타협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제2단계는 1982년 한스 아펠(Hans Apel) 국방부 장관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군대 일부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반성하면서 시작했다. 이때부터 가치·규범을 전수하되 군사 활동은 헌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제3단계는 2018년 독일 국방군-동독 인민군-서독 연방군의 역사 등을 포함하는 개선 노선의 발표였다. 헌법과 군인법의 가치, 군사사(軍事史)의 강조가 돋보였다. 국가와 자유·평화 수호 의지, ‘내적 지휘’와 ‘제복을 입은 시민’ 개념, NATO·EU 군대로의 통합, 독일 재통일 간 연방군 통합 활동 과정, 국제적 위기관리, 국내외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에서 성공한 구호 활동 등도 내세웠다. 다만 군사력을 남용할 경우 파멸되기에 모든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근거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독일군은 지휘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 군대로 전환됐다.

현존 최강 미국의 군대 역시 과거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1973년 베트남 전쟁에서 패전하여 철수한 이후 하극상 사고의 빈발로 군에 대한 불신이 커졌었다. 그러나 주요 직위자들의 울골은 소신과 철학을 바탕으로 혁신을 시작하였다. 1974년 초대 육군 교육사령관(William E. DePuy 대장)은 새로운 방식과 절차로 야전교범을 만들면서, 내·외부의 강한 압박과 저항에도 현대 야전교범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FM 100-5(Operation)>을 출간하였다.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자 주한미군 참모장(John. K. Singlaub 소장)은 “잘못된 정책이 한국의 방위력을 약화시키고, 김일성은 다시 남침할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1991년 걸프 전쟁에서는 ‘공지 전투’ 개념을 통해 군의 위용을 높였으며, 2024년 12월 美 육군참모총장(Randy A. George)은

비대한 219개 장성 직책 중 정원의 5%가 넘는 12개를 감축하며 비대해진 조직을 정비하였다.

한편 주변 권위주의 국가들의 군에 대한 혁신의 노력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중국은 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면서 2021년엔 마하 6인 극초음속 비행기(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고, 세계 최초의 ‘군용 5G(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군용 이동형 원자시계’을 개발하였다. 2023년 美 해군정보국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함정 건조 능력은 232(中) 대 1(美)로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절대 패권국 지위를 넘볼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약 70%로, 약 7% 수준인 러시아와는 많은 차이를 난다. 북한은 그간 러-북 혈맹관계를 강화시켰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규모 북한군을 파병하며 막대한 통치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받은 첨단 군사기술은 핵·재래식 군사력을 고도화하며, 자폭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등 ‘작전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강경한 대미전략’ 면에서는 모호함을 유지한 채, 한국과의 ‘적대적 2국가’를 선언하면서 회색지대 도발과 대남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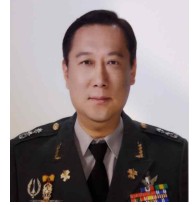
안타깝게도 한국은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적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 채 군 지휘부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오로지 ‘권력투쟁’에 여념이 없다. 한국은 1945년 일제의 무단 통치를 벗어나 정부를 수립하고, 국방경비대(이하 군)를 창설하였다. 헌법 제5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군의 ‘정체성(identity)’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직업(calling)이기에 존경과 명예가 뒤따랐다. 그러나 정치인(Politician)·이해집단의 진급(보직)을 미끼로 한 ‘유혹·압박’과 ‘대군(對軍) 포퓰리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군의 고유 가치·역할을 정립하는데 혼란을 주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한다. 다수의 군사전문가는 “정치·외교·안보·사회적 혼란기에 도 군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져야 한다”며, “지휘부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군심은 더 흔들릴 것이며, 전투대비태세도 취약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의 고유한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정치적 중립은 기본이며, 직업군인들 각자가 ‘전문성’과 ‘합리·논거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선진국 독일 연방군과 G1 미국군은 ‘혁신의 큰 고통’을 부단히 감내하면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역할, 그리고 자국에 맞는 전통을 확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군도 과감한 결단과 강력한 혁신을 통한 ‘선진 국군의 위용’이 보여 지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소회

이 재 권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단위원
/경기대학교 교수, 경영회계학 박사)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의미와 사례

주지하듯이 ‘노블리스 오블리제’(프랑스어: noblesse oblige, IPA(국제음성기호): /nobles obliʒ/, 영어: Nobility Obliges)란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용어이다. 14세기 백년전쟁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게 포위를 당한다. 1347년 칼레는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지만 더 이상 원병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항복하게 되고,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이 파견된다. 그러나 점령자는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동안의 저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도시의 대표자 6명이 목을 매 처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칼레 시민들은 혼란에 처했고 누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모두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타슈 드 생 피에르’가 책임을 통감하며 처형을 자청하였고,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귀족들도 처형을 받겠다고 동참한다. 그들은 다음날 처형을 받기 위해 교수대에 모였다. 그러나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들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죽음을 자청했던 시민 6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하여 살려준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에 의해 기록되고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상징이 되고 있다.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뜻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과거 로마제국 귀족들의 불문율이었다. 로마제국의 귀족들은 자신들이 노예와 다른 점은 단순히 신분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로마 공화정과 고대 그리스의 지배계급들이 누리는 특권은 사회공동체에서의 의무를 다할 때에 주어지는 권리였다. 로마 공화정 귀족들은

재산을 사회공동체로 환원시켰으며, 국민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솔선하여 국방의 의무 또한 다함으로써 귀감이 되었다. 귀족들은 카르타고의 명장인 한니발이 지휘한 카르타고군대와 벌인 포에니전쟁에 참여하였고, 16년간의 제2차 포에니전쟁 중에는 13명의 집정관이 전사하였다. 귀족들의 많은 전사로 인해 사회공동체 귀족들은 15분의 1미만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사자의 3분의 1이 귀족인 적도 있다고 한다. 집정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고위공직자로 귀족계급을 대표하며, 로마 공화정의 관리 중에서 가장 높은 관직이었다. 또한 로마에서는 병역의무를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호민관이나 집정관 등의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었을 만큼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이 당연하게 여겨졌다고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에 대한 현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우리 사회 현실을 들여다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은 커녕 오히려 부와 명예가 많은 부류들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애쓴다는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학부를 나온 일부 정치인, 법조인들의 올바르지 못한 정치적 행태에 대한 실망감은 이미 오래전부터 켜켜이 쌓여 있다. 더불어 군의 간성인 장교집단에서도 일부 장교들이 학연, 지연 등의 연결고리와 이에 이은 정치적 포퓰리즘식 부화뇌동에 빠진 채 표리부동하는 행태는 사뭇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종된 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입법·사법·행정부의 혼란스러운 국가 중대사 해결에서조차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이 상실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부와 명예가 많은 부류들일수록 더욱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실, 이렇게 척박해져 있는 우리 사회에 희망마저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나날이 변화되는 우리 사회의 각종 현상들과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존망은 위태로움이 더해간다. 특히 불변의 적, 북한이라는 큰 상수를 가진 우리로서는 국가안보만큼은 반드시 확고히 해야 함은 물론, 각계각층에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이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변화되어야 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위정자들은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찬란한 5천 년의 역사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의연하게 지키고 버텨온 기개를 바탕으로 국가의 안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가 주요 정책을 다루는 위정자들과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앞장

서서 솔선수범하고 희생할 줄 아는 아름다운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에 대한 소회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의 핵심은 책임감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시대 청렴결백한 관료제를 지키기 위해 ‘청백리 운동’을 전개한 것처럼 국가의 관료들은 사욕을 과감히 배제하여야 하며, 당리당략을 추구하거나 국민을 핑계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통감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깨끗한 정치를 해야 하며, 또한 화합과 협치를 도모하여야 한다. 국가방위 또한 철통같은 대비태세가 매우 중요하며, 개인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 사사로이 군대를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올바른 이념과 사상무장으로 정치적인 편견이나 편향을 버리고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명감을 군인 양성기관에서부터 강하게 교육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기업, 종교단체, 사회지도층의 리더들 또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과 언행이 중요하다. 과거 월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조직이 와해될 수 있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날이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발 빠른 대응과 대처도 중요하겠지만, 도덕적 사고와 윤리적 행동이 조직의 흥망을 좌우하는 만큼 이제는 냉철한 사고를 가지고, 어떠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칼레의 대표자들처럼 책임을 통감하고 앞장서서 희생하며 대처하는 지도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회색지대(the Gray Zone) 전략

장 재 필

(향군 선임연구원, 정치학박사)



‘회색지대(the Gray Zone)’라는 용어는 미국의 국방부가 4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2010년 군사력 운용계획·군사전략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사전적 정의는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는 행위나 개념, 그런 행위가 벌어지는 지역이다.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본인(국)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통상 중립의 긍정적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곤 한다. 이러한 의미가 국가존립을 위해 쓰인다면, 즉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평화가 유지되는 것도 아닌 상태의 전략으로 쓰일 경우에는 상당한 파급효과를 볼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사례에서 이를 살펴본다.

첫째,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자행했거나 자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색지대 전략은 ‘오물풍선 살포, 소규모 테러·요인암살, 기반시설 파괴, 가짜뉴스 유포,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및 사이버 공격, 자국 핵시설(우라늄 생산시설 등)’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한국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저장도 도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무력도발은 자국의 도발원점 타격피해에 이은 확전 가능성으로 북한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특히 오물풍선 살포는 오랫동안 준비해왔을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본다. 미사일보다 비용 면에서 많이 싸고 원하는 곳에 살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살포 이유는 우리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이를 통한 남남갈등(국론분열), 공포감 조성(필요시 생화학무기·페스트균 탑재 살포)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간헐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북한의 서해 NLL 주변에서 GPS 교란행위와 사이버 공격도 마찬가지이다. 서해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내륙의 공공·사적기관 인프라들이 GPS를 활용한 컴퓨터 첨단기술 체계로 이뤄진 점을 이용, 이러한 행위를 가할 경우 사회혼란, 금융·경제·교통·통신 등의 마비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막대한 차질을 줄 수 있다. 저장도 도발의 회색지대 전략으로 얻는 이익(남남갈등 등)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로 큰 군사충돌까지는 아니지만 유·무형의 소규모 공격으로 상대방(국)에게 타격을 가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은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천명하면서 대남관련 선전매체와 기구들을 폐지하여 지금은 그 흔적이 거의 사라지고 없는데, 이를 발판으로 대남공세의 정도가 격화되면서 변칙도발(회색지대 공세)의 묘안을 짜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전략을 쓰는 주도권자 입장에서는 큰 노력과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많은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에 낫 놓고 당하는 방어자 입장에서는 비례성 원칙 또는 그 이상으로 대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 현실에 놓이게 된다. 만약에 비례성 원칙에 의거 대응하게 되면 국지전에 이은 전면전 확대로의 위험부담이 따른다. 이렇게 될 경우 극심한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다가올 것이다. 극심한 피해의 정도는 현재 끝이 보이지 않는 러-우전쟁 및 이-하분쟁에서의 상상하기 어려운 참사 수준일 것이다.

둘째, '희대의 중국 스파이 스페이푸 사건'을 들 수 있다. 중국 경극배우(오페라 가수) 겸 스파이인 '스페이푸'는 양성애자로서, 1986년 프랑스 외교관 베르나르 부르시코에게 여성이라고 속여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후 발각되어 동반 간첩혐의로 체포돼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프랑스와 중국 간의 긴장관계 완화조치로 풀려난 사건의 당사자이다. 스파이 활동기간(1969~1979년)에 무려 프랑스 기밀문서 500여 개를 중국 당국의 압력으로 제공했다고 한다. 그들의 '플라토닉 로맨스'가 20년 간 유지되는 동안 수많은 프랑스 정부의 외교문서와 기밀문건이 스페이푸에게 넘겨져 중국으로 제공된 희대의 사건이다. 이 역시 발각했더라도 즉시 상대국에 공격하기에 애매한 현실이었을 것이다.

셋째, 중국 시진핑의 타국에서의 비군사적 공포정치이다. 2023년 11월 15일 APEC회의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지는 동안, 중국 당국이 미국 내의 자국 외교관들과 친중국 디아스포라(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 시위를 조직하고, 자국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을 물리적 폭력으로 침묵시켰다. 이는 시진핑의 미국에까지의 공포정치, 즉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비군사적·강압적 회색지대 전략으로 볼 수 있겠다.

넷째,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해상민병대(Maritime militia)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전술 구사이다. 중국은 자국과 필리핀 간 해양영유권 분쟁을 회색지대로 만들기 위해 해군 및 해경 함정 이외 해상민병대 배치를 통해 약점을 수시로 자극하면서 군사적 충돌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즉 필리핀과 동맹국 미국이 중국과 필리핀 간 해양 영유권 분쟁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물리적 충돌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미국의 개입을 어렵게 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중국 해양경찰은 물대포, 레이저빔 투사 등의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공격으로 필리핀과 미국이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기 어렵게 하는 기술을 펼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의 러-우전쟁 파병으로 타지의 개활지에서 군인들이 희생되고 있다. 파병에 대한대가로 러시아의 핵전력·우주분야를 포함한 첨단기술 제공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한반도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의 자연스런 개입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12월 4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서’ 상호 교환을 마치면서 조약이 4일 공식 발효됐다. 주지하듯이 북·러 간 이 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과거의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도발주체나 수단, 피해유발의 고의성 등을 애매하게 설정한 국지도발 후, 한국군의 대응을 무력 침략행위로 간주해 러시아의 군사개입을 이끌어 낼 회색지대 전략의 시나리오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북한과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서 본 공통점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대외적으로 당당하게 내놓고 하지 못하고 뭔가가 석연치 않고 꼬수를 부리는 느낌이다. 은밀한 저강도 도발로 상대방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수행하는 권모술수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격변의 축에 놓여있는 국가들, 즉 베트남, 필리핀도 이전의 노선을 지키지 않고 자국의 색깔을 감추면서 노선을 바꾸기도 한다. 베트남은 1960~1975년 전쟁 이후 미국과 한국을 적대시해왔지만, 중국과의 1979년 전쟁 이후 소원해진 관계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빌미로 미국 편에서 서 있으며, 한국과도 경제·문화·교육·인적자원 등의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베트남은 과거의 적대국이었던 미국, 한국과 중간매체의 변수(중국 등과의 소원한 관계)로 인해 친교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격변의 축에 놓여있는 국가들이 대외적으로 자국의 색깔을 나타내지 않고 강국이 뺏어놓은 연합구성체에 합류하여 강대국의 비호아래 자국의 안보를 맡기는 추세가 점증하고 있다. 북한의 러-우전 파병, 한국의 나토회담 참석 및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 노력 등이 최근의 사례들이다. 겉으로 나타내지 않으면서 강대국에 편승하여 공동이익을 취하는 전략, 이 역시 자국 존립과 발전을 위한 회색지대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도 한반도의 극심한 긴장 속에서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색지대 전략을 써야 한다. 북한정권을 대상으로는 그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여기는 ‘확성기 방송’ 재개,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해놓은 강대국들 국가안보연합체(오커스·쿼드·나토 등)와 경제협력체에 ‘옵서버 및 정회원 자격’으로 참가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어야 한다. 국가안보 만큼은 정당들의 당리당락, 정권교체에 영향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불변의 국가적 사인임을 사명으로 하여 미국과의 동맹은 물론, 한미일 연합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또한 적대국 북한정권과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북한 주민 관리를 위해서도 권위주의 국가 중·러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소원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회색지대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선진국들의 뒷배를 밀어주는 역할이 아닌,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 02-499-0201 / korvass0201@naver.com